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3 | 2023.09.26 (2023.09.18 ~ 09.25)

※ [부록]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정리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감일정 포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 9. 2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9.18~9.24)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여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1~'25) 배출허용총량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 개선방안으로 인해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여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합리적 탄소가격 설정을 위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장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주요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스스로 또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2023. 9. 21)한 바, 이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자율 규제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대표발의)**」,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국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0/10(화)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국정감사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위는 9/27(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9/25), 산자위(9/25), 환노위(9/26) 등은 각각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 차

※ [부록]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정리 (국정감사계획서 및 국감일정 포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기재부) 5
-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기재부) 10
- 행정조사 효율화를 위한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7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8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9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9

3. 법률 발의안

[바로가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2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2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2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2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4인) 23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0인) 25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2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2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0인) 26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의원 등 11인)..... 28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0인) 2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2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4인) 3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3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 3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32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 9. 21) [바로가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3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34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36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37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18~9.24) [바로가기](#)

-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 (방송통신) 4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2023-09-18
-------	---	------------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①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②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③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④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논의함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 고용 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대내·외 위험(리스크)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함

특히,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및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의 외부출자(40%→50%)와 해외투자(20%→30%)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또한, ② 내년 중소기업 1,100개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가상모형(디지털트윈)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생산시설 고도화를 지원하고, ③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항선박 등 위성통신과 연계한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④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25~)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활용을 가속화하는 등 신산업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할 예정임

별첨1)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추진 전략

별첨2)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별첨3)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별첨4) 「에듀테크」 진흥방안

◇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패키지를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클러스터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민간 · 지자체 ·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유망 클러스터 집중 지원

전략		핵심과제
글로벌 클러스터 활성화	중앙정부 지원 패키지	① 규제 완화를 통해 클러스터 구성원 밀집 배치 촉진 ② 수요 맞춤형 네트워킹 활성화 ③ 앵커기업-스타트업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활성화 ④ 원천-상용화 기술 R&D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⑤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및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⑥ 우수 기업-인재 유치
	지자체 지원 패키지	① 맞춤형 도시계획 등으로 한국형 쉼달스퀘어 조성 ② 클러스터 입주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③ 핵심인력 정주여건 개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 지원

전략		핵심과제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① 7대 R&D 선도프로젝트 추진 ② 디지털바이오 성장기반 조성 ③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②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 조성 ③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

별첨1)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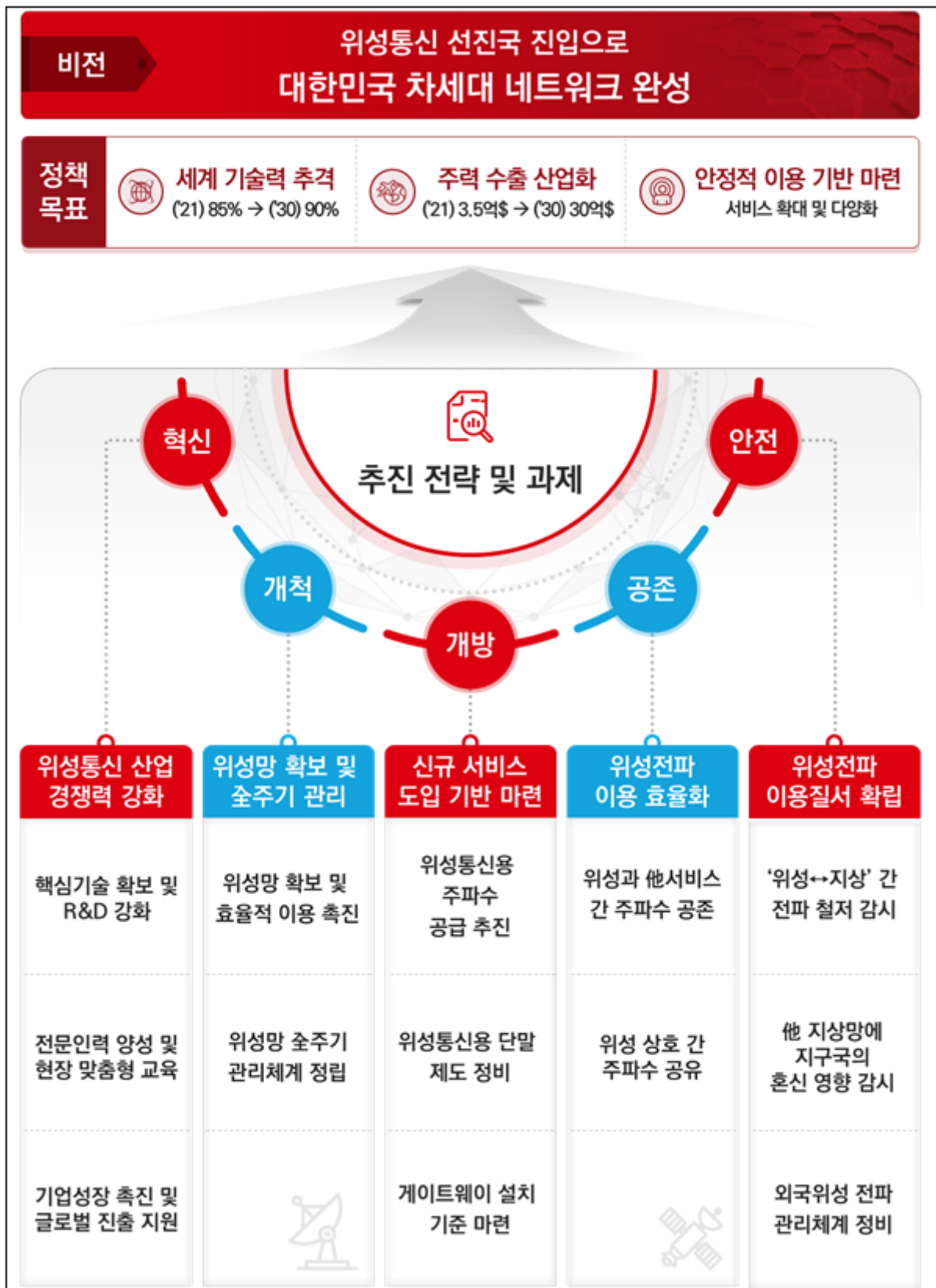
비
전新 디지털 제조혁신 『MIDAS 2027 전략』을 통한
초일류 제조 강국 도약MIDAS 2027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DX Acceleration Strategy 2027) :
제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제조업의 황금기 구현

- ◇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 기업 5,000개 육성
- ◇ 민간·지역 주도 2만개 중소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유도

기존정책 (As-was)	향후방향 (To-be)
정부 주도	민간·지역 주도
뿌려주기식 양적 확대	디지털 제조혁신 질적 고도화
획일적 지원	기업역량별 맞춤 지원
기업간 협업 부족	데이터 기반 협력 강화
공급기업 난립	공급기업 선별·육성

전략	정책과제
1. 기업역량별 맞춤형 지원	① 중소기업 DX 역량평가 시스템 구축 ② 기업 유형별 고도화 촉진
2. 제조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① 한국형 제조데이터 참조모델 마련·확산 ② AI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공유 촉진
3. 민간·지역 주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① 자발적 기업협업 환경 조성 ② 민간 중심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기술 공급기업 역량제고 및 시장 자정	①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 ② 부정행위 근절 및 시장 자정

별첨2)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 전략



별첨3)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 “에듀테크 진흥”이란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 교육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 공교육과 에듀테크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의 변화 모습

		현재	변화
교육 산업	기업	개인 학습자 대상 서비스 중심 ⇒ 사교육 유발	학교 교육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 공교육 지원
	기술	기술 간 결합 및 상호연계 부족	클라우드, AI, AR·VR,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적용, 기술 혁신을 선도
	시장	국내 시장 위주	공교육과 결합하여 해외 시장 진출
교육부의 역할		직접 기술서비스 개발·제공 (산업의 성장을 방해)	에듀테크 진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민간과 협력, 산업 성장 지원)
학교 현장	수업	서책 교과서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	AI 디지털교과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 수업 (토론식, 프로젝트, 거꾸로 학습 등)
	교사	지식 전달자	학습 디자이너, 사회·정서적 지도자
	환경	하드웨어 중심의 경직적 제도와 문화	다양한 에듀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유연한 제도와 문화

별첨4) 「에듀테크」 진흥방안

기획재정부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

2023-09-20

기획재정부는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여 배출권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함. 이외에도,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1~'25)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개선 방안으로는

① [참여자 확대]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시장참여자 단계적 확대

- (위탁거래) 할당대상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배출권 위탁거래(중개업) 도입('23~, 배출권거래법 개정)
- (참여자) 증권사 외 금융기관(예: 자산운용사 등)의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24), 시장 여건에 따라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25~)

* 확대 대상 및 시기는 금융기관 참여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결정

② [상품 다양화]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 ETF)을 출시하고, 선물시장 도입

- (금융상품)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하여 민간의 간접투자 활성화('24~)

* (예시) ETN(상장지수증권, 증권사가 발행), ETF(상장지수펀드, 자산운용사가 발행) 등

- (선물시장) 배출권 가격변동성 완화 및 배출권 투자 시의 위험회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25)

* (~'24) 선물상품 세부 운영방안 설계, (~'25) 시스템 작업, 선물시장 개설 추진

③ [시장 안정화] 배출권 이월제한을 완화하고,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 (이월제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할당계획 변경, '23)

* (잉여업체) 순매도량의 1배 → 3배, (부족업체) 부족한 양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

** (기존) 인증 후 2년 이내 상쇄배출권 전환 → (개선) 인증 후 5년 이내 전환

- (경매조정)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방안 마련('24)

* Market Stability Reserve: 배출권 수급 상황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간 경매량을 조정하는 제도

-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의 가격 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관련 고시 개정, '23)

- (안정화조치) 법적 시장안정화 조치의 시행시기·방식 등을 공표하여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23~)

④ [거래기반 강화] 배출권 거래 참여를 유도하고 건실한 감독체계 구축

- (평가체계)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값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향(당초 32% → 18%) 조정('23~)

- **(감독체계)** 제3자 참여 확대,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환경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 감독체계 구축('24)
- **(교육)** 배출권 거래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탁거래 등 사전교육 실시('2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규교육 과정 신설('24)

법제처

행정조사 효율화를 위한 법률 및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2023-09-21

법제처는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행정조사의 실시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의 일괄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은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정비안을 마련했고,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령별 정비 대상 및 내용으로는

① 법률 6개

연번	법령안	정비 대상	정비 내용	소관 부처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	기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는 '가족친화인증'과 그 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개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기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는 '가족친화인증'과 그 조사 대상 및 내용이 유사 개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폐지	여성가족부
2	식품위생법 (제48조의2제1항, 제3항)	식품 HACCP 인증 연장	기존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진행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1항, 제3항)	축산물 HACCP 인증 연장	기존 HACCP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진행함에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 개선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정기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인증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	기존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등의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연 2회 (4월 말, 10월 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개선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 1회(4월 말)로 완화	고용 노동부
5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8항)	출입 · 조사	기존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지도 · 감독 관련 출입 · 조사시 사전통 지 규정 부재 개선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고용 노동부
6	항만법 (제110조제9호)	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존 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벌금 및 과태료 중복 규정 개선 벌칙 규정 삭제	해양 수산부

② 대통령령 3개

연번	법령안	정비 대상	정비 내용	소관 부처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호)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	기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 검사 시 자료의 제출이나 보 고 요구 등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미비 개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업무 위탁근거 마련	문화 체육 관광부
2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기존 산업디자인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미비 개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업무 위탁근거 마련	산업 통상 자원부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기존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근거규정 미비 개선 전문연구기관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고용 노동부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4-09-22 시행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36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및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②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및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제6조 및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육성주체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및 기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선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제1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신기술·신산업 창출 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제18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⑤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제2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25 시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됨

이에 따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의 요청 절차, 촬영 거부의 구체적 사유, 촬영한 영상의 열람·제공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인정 요건 및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9조의9 등)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22 시행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원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수단을 정하면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3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69조제1항, 제387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19제1호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0 ~10.30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의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부과대상 및 목적이 같은 부담금은 통합하는 한편,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 (별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예치금·수수료·협회비 성격으로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함

② 부과대상·목적이 같은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통합 (별표)

- 부과대상 및 목적이 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통합함

③ 법률 위헌 결정 등에 따른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 (별표)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 법상의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근거 조문이 변경된 부담금의 내용을 정비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전화: 044-215-5376, 팩스: 044-215-81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21 ~10.31
---------------	-----------------	----------------------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추동하면서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경쟁력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갑을문제,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지원함에 따라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법률 상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스스로 또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11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안 제22조의11 제1항)**
 -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 수행의 근거조항 신설
- ②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안 제22조의11 제2항, 제3항)**
 -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 ③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안 제22조의11 제4항)**
 - 자율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④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고려 (안 제22조의11 제5항, 제6항, 제7항)**
 - 민간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업무 수행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044-202-6620, 팩스: 044-202-6041\)](tel:044-202-662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19
~10.30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항목과 지원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 (시행령 제명, 안 제1조, 제2조)
- ②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정보원장 추가 (안 제6조)
- ③ 공급망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생산중인 품목의 반입 명령과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 ④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의7, 제59조의2)
- ⑤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의4~제33조의5)
- ⑥ 재고확대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3조의6, 제33조의7)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mailto:sa@kpa.go.kr) (전화: 044-203-4913, 팩스: 044-203-4725)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19
~10.30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정된 법률·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 (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제2조)
- ②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 ③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5조의3)
- ④ 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5조의2)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mailto:sa@kpa.go.kr) (전화: 044-203-4913, 팩스: 044-203-4725)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20
~10.30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 (안 제2조)
- ②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 (안 제3조)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2, 팩스: 044-203-4710\)](tel:044-203-4022)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09.19
~10.30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 (안 제2조제5호)
-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6조의4제6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02-2100-2512, 팩스: 02-2100-2639\)](tel:02-2100-25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2023-09-18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2023-09-21 발의

현행법에서는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제도를 통하여 공시의무 부과, 상호출자·순환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권한 및 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족 등이 최대출자자인 회사는 물론, 동일인의 관련자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동일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현실임

현재 영리법인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영리법인의 독립경영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부여하되, 과도한 부담을 주는 킬러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국가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호 · 제31조제4항, 안 제125조제2호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2023-09-2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2023-09-18 발의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존 상가임대료를 인하여 혜택을 받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하여 상가임대료의 인하를 독려함으로써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2023-09-19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3항)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2023-09-19 발의

현행법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2023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보험회사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수반되는 보험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4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2023-09-21 발의

2023년 1월 대법원은 담배 재료와 제조 기계를 놓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구매할 수 있는 ‘수제담배 업소’의 영업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림. 그런데 업주가 이미 제조해놓은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허점을 노려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제담배 업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임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담배업체가 판매하는 담배에서 시중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더 많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제담배에 사용되는 담뱃잎은 농산물로써 시중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4인)

2023-09-19 발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하고,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 (안 제5조)
- ②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④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⑤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 (안 제13조)
- ⑥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⑦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⑧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및 제20조)
- ⑨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0인)

2023-09-22 발의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2023-09-22 발의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로 규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3호 개정)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기탁등록을 하려는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고시 또는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8조제6항 신설)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에 국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사업의 신청 시에도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등)

행정안전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2023-09-18 발의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은 등록 단체가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등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최근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2022. 12.~2023. 5.) 결과, 조사 대상 1만 1,195개 단체 중 33.7%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3 신설 및 제13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0인)

2023-09-22 발의

현행법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은 음악영상파일등을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등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신속한 홍보가 중요해지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등의 문제로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3-09-19 발의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안전망·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인력·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③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전담기관 지정,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계정 설치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④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운영, 교육, 컨설팅 지원, 문화 확산, 전문기업등의 육성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심의 및 승인, 이행 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승인 취소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 ⑥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 ⑦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 제26조, 제27조)
- ⑧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8조, 제29조)
- ⑨ 업무의 위탁,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재의원 등 11인)

2023-09-20 발의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을 도모하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를 두어,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탄소중립화가 추진됨에 따라 국제 환경규제도 강화되면서 미국·EU 등 주요국과 기업들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연료 등의 보급 및 사용을 촉진하고 있어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이용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이외의 원료(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를 석유와 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석유업계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확보, 탄소중립화의 기여 및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으로 확대 규정함 (안 제1조)
- ② 석유정제업을 석유 외에도 석유와 석유 이외의 원료를 혼합·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변경 규정하고,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의2 신설)
- ④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이외의 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용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안 제38조의3 신설)
-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석유 이외의 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둠 (안 제39조제5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0인)

2023-09-20 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국내광업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해당 공사와 업무적으로 유사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였음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였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고, 부칙으로 해당 계정에서 관리하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코발트·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텅스텐·갈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티타늄(항공우주·드론 산업)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산출지역이 제한적이고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어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고,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및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2023-09-21 발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를 권고할 수 있거나,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물량 및 정보 부족, 높은 단가 등을 이유로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RE100 이행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전체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4인)**

2023-09-22 발의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정부가 임금교섭 노력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져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조성하여 대기업이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2023-09-18 발의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자격정지와 처벌을 받으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되어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며, 의사의 처방요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되어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

2023-09-19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

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2023-09-22 발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또는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증기간(3년) 동안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6조, 제29조)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3. 9. 2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3-09-21 의결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14조, 제15조 신설)
- ③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 (안 제17조 신설)
-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8조)
-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안 제19조 신설)
- ⑥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함 (안 제20조)
- ⑦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 (안 제22조 신설)

- ⑧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함 (안 제25조)
- ⑨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6조 신설 및 제35조)
- 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안 제27조제1항, 제3항 신설)
- ⑪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함 (안 제28조 신설)
- ⑫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 (안 제29조)
- ⑬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30조 및 제34조제2호 신설)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3-09-21 의결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2조제3항)

한편, 교원의 생활지도, 수업 및 평가,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은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학교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신설)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3-09-21 의결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의5 신설),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 (안 제20조제1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였음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또한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바, 학교와 학교의 장으로하여금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3 신설)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3-09-21 의결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21조의3 신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으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울러,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치원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 (안 제21조제1항)
- ②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안 제21조의3 신설)
- ③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며, 교원과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안 제21조의4 신설)
- ④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1조의5 신설)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안전조정위	9/25(월) 10:00	- 법안 심사
외통위	법안소위	9/25(월) 09:00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
국방위	청원소위	9/25(월) 13:00	- 청원 심사
	인사청문회	9/27(수) 09:00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회
문체위	전체회의	9/25(월) 13:30	-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산자 중기위	전체회의	9/25(월) 14:30	-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환노위	전체회의	9/26(화) 10:00	-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의결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5(월) 09:30	위성통신 시대 개막,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중·저궤도 통신용 위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박완주·정필모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9/25(월) 10:00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9/25(월) 10:00	서울 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 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박성준,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9/25(월) 10:00	왜 2500세대 신축 아파트를 헐어야 하는가? -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9/25(월) 10:00	초거대 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반도체 전쟁	윤영찬·변재일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9/25(월) 10:30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강득구·김두관· 김민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9/25(월) 11:00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 강화 정책 세미나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9/25(월) 14:00	[북한보건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 시리즈6] - 생태공동체로서의 한반도	국회국제보건 의료포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9/25(월) 14:00	농협유통 적자, 농민·소비자·노동자에게 왜 문제인가?	위성곤·김영주 의원실, 민주노총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9/25(월) 14:00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삼석·최춘식 의원실, 산림청	국회도서관 강당
	9/25(월) 14:00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개발을 위한 세미나	소병훈·홍문표· 이달곤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9/25(월) 14:00	지역사회 청년지원 전담기관 청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모색	윤한홍 의원실, 청년재단 등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9/25(월) 15:00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9/26(화) 09:30	기후위기 시대 정부의 물환경 정책 평가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김영진·노웅래, 박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9/26(화) 09:30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신현영·오기형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26(화) 10:00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강훈식·김경협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9/26(화) 13:30	바이오가스 정책 및 기술 토론회	임이자 의원실, 환경부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9/26(화) 14:00	우리는 AI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개척한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9/26(화) 14:0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1대 국회 에너지전환 입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9/26(화) 15:30	2023 충남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훈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4(수) 10:00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 토론회	강은미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04(수) 14:00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춘식 의원실, 가평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5(목) 10:0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윤창현·박성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5(목) 15:00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조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0/06(금) 10:30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이장섭 의원실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자료집 등	9/25(월)	「팩트북」 제104호 발간 - 정부혁신	국회도서관	
	9/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2호 발간 -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9/26(화)	「현안, 외국에선?」 발간 -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간병) 분야 현황과 과제 : 노노(老老)개호와 개호난민을 중심으로		
	9/27(수)	「금주의 서평」 제647호 발간 - 도서명 :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 저 자 : 조현웅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8(월) 09:00	[사회적기업 성과 정책 포럼] - 지원받는 객체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사회적기업 역할	박정·이수진(비)· 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8(월) 09:45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구자근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8(월) 10:00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	김미애 의원실, 건미포럼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8(월) 14:00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7] - 국내 OTT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변재일·김영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9(화) 09:30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9/19(화) 10:00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토론회	강훈식·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9(화) 14:00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민주당 디지털 플랫폼 정책TF	의원회관 2간담회실
	9/20(수) 14:00	데이터로 보는 가계통신비 시사점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변재일 의원실, 한국경영과학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
	9/21(목) 15:00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9/20(수)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3-5호)」 발간	국회사무처	
	9/22(금)	「2023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안 입법의회견」 발간		
	9/1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1호 발간 -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국회도서관	
	9/20(수)	금주의 서평 제646호 발간 - 도서명 : 세습 자본주의 세대 - 저자 : 고재석		
	9/20(수)	「World&Law」 제2023-18호 발간 - 출생통보제, 아동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9/18(월)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이슈」 보고서 발간	예산정책처	
9/19(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I~IV)」 보고서 발간 -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 -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I -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V		
9/20(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 발간		
9/21(목)	재량지출에 대한 중장기 재정전망 방법론 연구		
9/18(월)	「NARS 브리프 20호」 발간 -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입법조사처	
9/18(월)	「이슈와논점 2139호」 발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9/19(화)	「NARS 브리프 21호」 발간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		
9/20(수)	「이슈와논점 2140호」 발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9/20(수)	「NARS 브리프 22호」 발간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9/21(목)	「이슈와논점 2141호」 발간 북·러 군사협력의 배경과 전략적 의미		
9/21(목)	싱가포르 출장보고서 - 과학기술 ? 정보통신 진흥과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9/22(금)	「이슈와논점 2142호」 발간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18~9.2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9/22(금)	방송통신(TMT)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 부록 - 2023년도 국정감사 주요 이슈 】

2023년도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입니다만, 필요할 경우 각 소관 상임위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감 출석요구를 통해 일반 민간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나 현안에 대해 그와 관련된 기업의 대표나 관계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이슈 및 현안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적하며 해결을 위한 기업의 입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로부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질의에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증인(또는 참고인)의 답변에 따라 의도치 않은 기업가치 하락이나 분쟁 발생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21대국회의 마지막인 **2023년도 국감은 여야 합의를 통해 10/10(화)~10/27(금)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각 상임위별로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등을 선정하여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Law Focus 제203호에서는 별도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지난 제198호 참조)와 상임위별 증인신청현황, 각종 언론보도, 시민단체 등의 제기 이슈 등을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위원회별 주요 이슈

○ 법제사법위원회

[바로가기](#)

- 전세사기 방지 문제 6

○ 정무위원회

[바로가기](#)

- 규제 혁신 추진 7
- 가계부채 위험 7
- 금융권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7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분쟁 조정 문제 8
-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 8
- 다크패턴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와 소비자보호 8
-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활성화 개선방안 모색 9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악화 대응 9
- 토큰 증권 및 NFT 가이드라인 도입 9
- 디파이 산업 규제 방안 10
- 은행권 경쟁력 강화 촉진 10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10
-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 11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부작용 대비 11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보완 11
-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수립 12

○ 기획재정위원회

[바로가기](#)

-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13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13
-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13
-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필요 14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대책 14
- 법인세제 개편 및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논의 14
- 횡재세 도입 15
- 주세 물가연동제 및 과세방법 개편 논의 15
- 상속세제 전환 및 상속세 관련 제도 현실화 15
- 종합부동산세 개선 16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및 경감세율 도입 16

-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16
-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 개선 17
-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17

○ 교육위원회 [바로가기](#)

- 디지털 교육 도입·활용을 위한 교육플랫폼 구축 18
-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18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19
-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19
-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 19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20
-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모색 20
-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20
-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및 육성 21
-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 21
- 데이터센터 설립 운용방안 21
- 사이버공격 대응 거버넌스 강화 22
-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강화 22
- 사이버 및 디지털 인재 양성 22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검토 23
- 방송광고 규제 정비 23

○ 국방위원회 [바로가기](#)

- 기체계의 수출 통제시스템 개선 24

○ 행정안전위원회 [바로가기](#)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문제 25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문제 2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반복적 지원 25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방안 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로가기](#)

- OTT 등장으로 영상산업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책 27
-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27

-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 해소 27
- 문화예술시설 배리어프리 확대 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로가기](#)

-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28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내실화 28
- 친환경농업 정책 재정비 28
-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확대 29
-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29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29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 30
-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 3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로가기](#)

- 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안정화 방안 31
-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31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 31
-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32
- ESG 경영 촉진방안 3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 32
-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33
-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33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33
- 메타버스 내 상표권 침해 대응 34

○ 보건복지위원회

[바로가기](#)

- 의료계 직역별 갈등해소 요구 34
- 방문진료/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 34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활성화 34
-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요구 35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정보 보안 대책방안 수립 35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촉구 35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표기 검토 필요 36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구매 문제 36
- 희귀질환 치료제 지원 확대 36
-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 37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설치 확대 및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수요 증대 대응방안 마련 3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도입 37
- 새로운 장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장사시설 확충 38
- 장애인 편의시설 증대 및 활동지원 강화 38

-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38
- 신종마약류 규제 필요성 39

○ 환경노동위원회

[바로가기](#)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40
- 포괄임금제 관련 쟁점 40
- 상생형 지역일자리 40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의 방향 전환 41
-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신뢰성 논란 41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41
- 페트용기 고품질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고 41
-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42
- 자격시험 부실 관리 관련 42

○ 국토교통위원회

[바로가기](#)

- 건설공사 부실 개선 43
-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43
- 전세사기 대책방안 및 임대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의무 43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44
- 주거급여 제도 개선 44
- 1인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44
-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45
-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45
-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방안 및 공정한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45
- 지상철도 지하화 45

○ 여성가족위원회

[바로가기](#)

-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46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6

2. 국정감사 절차도

[바로가기](#)

3.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

[바로가기](#)

4. 각 상임위별 국감 일정안 (달력식)

[바로가기](#)

법제사법위원회

□ 전세사기 방지 문제

- ‘빌라왕’사건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 속출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들은 주로 전세사기의 원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으로 보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정보와 권리 강화를 담고 있음
- 지난 2023.4.18.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 공인중개서의 설명의무가 추가되었다고는 하나 전세사기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방안 마련 요구 예상

관련 대상

법무부, 국토부

정무위원회

□ 규제 혁신 추진

-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장기간 미해결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각 부처별로도 TF를 구성하여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수립
- 또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민간주도 ‘규제심판제도’ 등도 신설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는 혁파하겠다는 의지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국무총리실

□ 가계부채 위험

- 현정부 들어 디레버리징이 진행중이며, 최근 주택 거래량 둔화 등에 따른 주담대 증가폭 축소, 대출금리 인상 및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신용대출 잔액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감소세였으나 4월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2022년 4분기말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 상존
-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추이를 보면, 2022년말 기준 14.3%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연체율 상승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능성을 고려한 대출규제 정비 등과 같은 정책방안들이 국감에서 중점 제기될 것으로 전망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기관

□ 금융권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불법증권계좌 개설, 차명거래 등 각종 비위 및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해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문제 제기
- 작년 국정감사시 5대 시중은행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후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 등은 오히려 증가 추세
-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금융권의 고임금, 과도한 성과급·퇴직금 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 예상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련 금융기관

□ 프랜차이즈 본사와가맹점 간 갈등·분쟁 조정 문제

-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종료, 본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점주에게 전가, 가맹점에게 신제품 강매,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 등 본사의 각종 강제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

□ 불공정행위 재발 방지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임.
-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사례 발생
-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증권범죄의 반복을 억제하기 위한 사후적 제재 강화 또는 보완 외에 공표제도 및 모니터링 협조체계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사전예방적 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성 제시 예상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증권업계

□ 다크패턴 등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와 소비자보호

-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소위 “다크패턴(dark pattern), 눈속임 상술”)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다크패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통신·금융, 사교육, 건설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진행중
- 온라인 시장의 다양화, 고도화로 인해 다크패턴의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은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될 수 있으며, 위법한 다크패턴과 적법한 소비자에 대한 설득적인 상술의 구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성 집중 제기 전망

관련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상거래업계, OTT서비스업체, 숙박플랫폼

□ 공정거래법상 동의를결의 활성화 개선방안 모색

- 동의를결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자의 동의를결 개시신청이 있었고 그 중 인용된 건은 10건에 불과하는 등 이용률 저조
- 최근 ICT 분야와 같은 역동적인 혁신산업 분야에서 동의를결의 활용은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시의적절한 시정방안을 적용하여 거의 즉시 정상적인 경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문제가 국감 이슈화 전망

관련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

□ 공정거래법상 동의를결의 활성화 개선방안 모색

- 동의를결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자의 동의를결 개시신청이 있었고 그 중 인용된 건은 10건에 불과하는 등 이용률 저조
- 최근 ICT 분야와 같은 역동적인 혁신산업 분야에서 동의를결의 활용은 문제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시의적절한 시정방안을 적용하여 거의 즉시 정상적인 경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문제가 국감 이슈화 전망

관련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

□ 토큰 증권 및 NFT 가이드라인 도입

-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증권 발행과 거래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토큰 증권 제도는 현재 토큰 증권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권한, 분산장부의 요건과 법적 효력, 전자등록기관의 권한과 책임, 토큰 증권의 권리 이전·행사 규정 방식, 발행·상장 과정 및 절차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향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 그리고 NFT 시장도 최근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게임, 보증서, 예술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NFT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NFT는 경제적 기능과 용도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논의 전개 예상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디지털자산업계, 블록체인업계, 증권업계

□ 디파이 산업 규제 방안

- 전통적 금융서비스(예금, 적금, 대출, 투자 등)를 가상자산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된 금융시스템에 구현,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것을 의미하는 디파이 산업에서 국내 디파이 시장에 예치된 가상자산 규모는 약 214.2억 달러임로 글로벌 디파이 시장(약 2,656.4억 달러) 대비 8.1% 수준임
- 최근 보안사고(해킹, 계정 탈취 등), 운영주체의 사익 추구(불완전한 탈중앙화), 취약한 이용자 보호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디파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지 여부,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블록체인업계

□ 은행권 경쟁력 강화 촉진

-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창출하여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횡재세 도입 주장 제기
- 금융기관의 잦은 비위행위, 금융사고 등과 연계되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예금·대출에 대한 은행간 경쟁 촉진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1.2배)가 영국(2.3배),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여러 국가가 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은행업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인당 GDP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령에 따라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려는 취지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고, 보호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어 국감에서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 간편결제(페이)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

-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최대 7배이상 차이가 발생
- 간편결제의 결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대한 문제점과 정책방안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금융위원회, 신용카드사, 간편결제업체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부작용 대비

- 지난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조항이 신설된 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 영역, 공공행정 영역 등 일부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송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의료, 유통 등을 비롯한 전 영역으로 확대됨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적절히 시행될 경우, 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개인정보의 활용도 제고, 개인정보의 독점방지 및 경쟁촉진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고,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감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보완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배상액의 상한이 실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손해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납소 가능성, 과잉배상 가능성,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우리 법체계간의 부정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필요

관련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기업

□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수립

- 챗GPT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산업이 급속 성장하는 한편으로는 정보주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데이터 처리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대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이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바,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위반하였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편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 및 서비스 제공까지 인공지능 전 과정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업계

기획재정위원회

□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생산가능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집중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 최근에는 개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면제하려는 입법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운용의 측면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와 향후 면제사업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 논의 제기 가능성 有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이 증가되고는 있으나 대다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규모에 그치고 있고, 협동조합 중 연합회 참여 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향후 설립된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각종 협동조합

□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필요

- 정부의 '22.11.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 발표이후 다양한 서비스산업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생산성 제고, 수출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도 미흡하다는 평가임
- 코로나19이후 침체된 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업 R&D 투자 촉진 유인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 집중 제기 전망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대책

-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사업의예산 규모 및 사업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많아짐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및 허위 기법 발달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실시하고(2014년 부정수급 종합대책, 2019년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등), 강도 높은 관리·감사 및 제재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수립·추진한 바 있으나 실효성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전망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감사원

□ 법인세제 개편 및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논의

-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세수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제기되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상황, 재정소요, 국제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금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주요 원인이 법인세 인하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금년 국감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법인세율 과세체계 개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부과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 횡재세 도입

-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2년 EU의 ‘연대기여금’ 도입 등 최근 각국에서 다양한 논의 전개중
-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정유회사,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적극적인 논의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금융계, IT·정유업계

□ 주세 물가연동제 및 과세방법 개편 논의

- 현행법상 주세는 2023년 4월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함에 따라 종가세 주종과 과세형평, 가격격락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pm 30\%$ 한도에서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주·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소폭 상승한 것을 이유로 주류 출고가격을 크게 올리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주세(탁주·맥주) 물가연동제 폐지하는 방안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국감 이슈화 예상
- 아울러 최근 주류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주류 과세방법에 대해서도 변화를 반영한 개편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주류업계

□ 상속세제 전환 및 상속세 관련 제도 현실화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부담 수준, 다주택자 중 과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적절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예상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부담 수준, 다주택자 중 과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적절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 종합부동산세 개선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부담 수준,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적절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예상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부담 수준,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적절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및 경감세율 도입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OECD국가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 유지
- 그러나 최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수요 증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 전망
- 아울러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 등 부가가치세의 광범위한 면세제도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금액인데 2023년 3월,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감사결과에서 은행이 교육세를 대출 가산금리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목적세인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응과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세 납세의무자 과세체계는 많은 논의 대상이 되어 온 바, 이에 대한 세제개편방안 수립의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금융계, 보험업계

□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 개선

- 기업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직접 발전,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간주하는 녹색프리미엄, 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거래계약(PPA) 등 높은 비용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
-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동참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수립 요구 가능성 有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에너지업계

□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2017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고 일몰이 연장되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 최근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글로벌 OTT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제작비 경쟁 등에 따른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다른 해당 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세제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성 제기

관련 대상

기획재정부, 콘텐츠업계

교육위원회

□ 디지털 교육 도입·활용을 위한 교육플랫폼 구축

- 디지털 교육의 도입·활용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임시적 해결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육부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환경을 급속히 디지털화 시키고 있음
-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술이 반영된 교육플랫폼 활용을 통한 미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립 필요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교육부, 교육 관련 기업

□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 정부는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5대 핵심분야(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부품·소재,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할 예정
- 이전 정부에서도 IT, SW, 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바뀌어도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교육부, AI·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등 교육기관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의 양성을 위해 지역내 직업계 고등학교와 기업 및 대학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이 있는 수도권으로 지역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방안 수립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교육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역기업 및 교육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 한동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 제정 논의의 방향성이 상실되어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부처의 중복개입과 법률의 중복 규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
-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가 다시금 동력을 얻고 있으며, 업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다만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논의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와의 충돌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

관련 대상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랫폼기업

□ 온라인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댓글, SNS 등을 통해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선동과 여론 왜곡에 이용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결과왜곡을 가져오기도 하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도 양산하고 있음
- 정부는 팩트체크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에 초단기간·다면적·악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짜뉴스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 논의 집중 예상

관련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포털·언론사 등 관련 기업

□ 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

- 포털뉴스의 알고리즘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포털뉴스 댓글의 여론 왜곡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정부의 언론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포털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포털뉴스 플랫폼은 언론사의 뉴스를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유통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만큼 이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논의

관련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포털·언론사 등 관련 기업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콘텐츠, 게시판, 상품 거래, 운송 등 다양한 유형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디지털플랫폼에서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2023년 5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용자 보호, 사업자 간 거래, 알고리즘 조정 연관 부처간 협의·조정 등에 따른 감독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기업

□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모색

-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 시장에서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기업경쟁력이 높고, 국내 OTT 플랫폼은 가입자 성장률이 둔화하고, 콘텐츠 제작비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량있는 국내 OTT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OTT 관련 기업,

□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 일상의 매 순간 통신 연결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기간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많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중단과 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음
-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기적인 이용 요금을 받지 않는 부가통신서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부가통신서비스 약관의 구체적인 장애 배상 규정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책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업, 소비자단체

□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및 육성

- 인공지능이 일상에 널리 사용되고 점점 더 다양하고 중요한 결정과 업무·수행에 활용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신뢰성,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선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학계·기업

□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

-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지만 데이터 거래 및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데이터 산업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지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용자들은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터 플랫폼·포털·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기존 문제의 반복 재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 국내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가 활발하게 거래·유통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활성화방안 논의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기업

□ 데이터센터 설립 운용방안

-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가 작동하는 물리적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데이터센터의 60%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
- 그러나 수도권은 여유 전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공급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서 지역분산 필요성 목소리도 높음
- 데이터센터 설립은 업무분야별로 여러 부처로 소관이 나눠져 있어서 수요자 접근성, 지역 민원,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범정부적 설립 및 운영 방안이 마련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련 기업

□ 사이버공격 대응 거버넌스 강화

- 사이버공격은 공공과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체제는 각 부처별로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사이버공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사이버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관계 기관 및 기업

□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강화

-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IoT 기기는 보안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IoT 보안인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IoT 보안인증은 임의 인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IoT 보안인증 유형·분야별 인증 편차도 큰 상황임
- 인증 의무화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해도가 높은 분야의 중대 IoT 기기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의무화 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구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IoT보안인증 관련 기관 및 기업

□ 사이버 및 디지털 인재 양성

- 사이버위협은 중소기업, 융합산업 등 보안이 취약한 분야를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등으로 사이버 전문인력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지속될 전망
- 그러나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감소(2019년 69개→2020년 53개) 등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부족
-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혁신 가속화'를 선정하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키로 하였으나, 인재 양성' 계획을 위한 일부 사업의 2023년도 교육 예정 인원이 당초 계획 수립 당시 계획 인원보다 축소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예상
- 그리고 SW·AI 등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필요성도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디지털 관련 기관 및 기업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제도 검토

-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의 절차에 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와 관련 유효기간, 심사기준, 조건 부과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 외국 대비 짧은 방송사업자의 유효기간, 심사항목의 모호성, 방송사 경영의 자율성 침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 방송광고 규제 정비

- 온라인광고 매출액이 방송광고 매출액을 빠른 속도로 앞지르고 있으며, 최근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도입 등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부의 방송광고 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방송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온라인플랫폼 등 관련 기업

국방위원회

□ 무기체계의 수출 통제시스템 개선

- 「방위산업법」 등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무기체계 수출 관련 허가 절차는 승인권이 행정부에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명시한 관련법령 부존재
-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논란을 계기로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에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임
- 무기 수출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국회의 외교·안보 관련 조약 및 입법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근거로 무기 수출 승인이나 허가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문제 제기 가능성 有

관련 대상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행정안전위원회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문제

- 현재 레저세는 사행행위에 부과하는 죄악세(sin tax) 개념으로 부과되고 있고, 관광·레저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관광상품이나 관광행위에 개별소비세(국세)와 부가가치세(국세)를 부과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사행산업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스포츠포토)을 추가하는 방안이나 명칭에 맞게 관광·레저행위를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제기 가능성

관련 대상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 관련 기업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문제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과세대상이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 라는 점에서 제한적임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상(사용후핵연료·시멘트 생산시설·해저자원·폐기물 매립시설·천연가스·석유정제 저장시설 등)에 대해 환경과세적 성격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필요성 제기

관련 대상

행정안전부, 발전·환경 관련 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반복적 지원

-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반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성 제기
- 매년 국가적·사회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반복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의 경우,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별도의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사업평가에 따른 사업배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전망

관련 대상

행정안전부, 관련 단체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방안

-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운영 중임
- 개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부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기될 가능성

관련 대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OTT 등장으로 영상산업 환경의 급변에 대한 대책

- OTT 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OTT 서비스의 분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진흥하고 규율할 수 있는 사업자 규정은 미비한 상황으로, 새로운 영상산업 및 법체계의 변화에 부합하는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정의 규정의 재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OTT 및 콘텐츠 관련 기업

□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 K-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성있는 K-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업, 저작권 관련 단체

□ 메타버스 내 저작권 침해 해소

- 메타버스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문화·경제적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과 정책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를 보여주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등 근본적인 대책방안 수립 요구 가능성 有

관련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메타버스 관련 기업, 저작권 관련 단체

□ 문화예술시설 배리어프리 확대

- 법상에는 장애인 대상 문화권 보장 및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시설에 접근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 교육과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 장애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 환경조성 등이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예상

관련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지 보전 및 이용 원칙 확립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5.12.) 후 과잉 규제 논란 등의 확산으로 한 달 만에 철회하는(6.14.) 일이 발생
- 농지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과 원칙이 반영된 농지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급 지자체의 농지이용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예상

관련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내실화

-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산업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이 종합적 견지에서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국내 농업부문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예상

관련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 친환경농업 정책 재정비

- 친환경농업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요 농정과제 중 하나이나, 최근 몇 년간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 비중(전체 농지의 5.2%)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 당시의 2020년 목표였던 8%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임
- 친환경농업 정책 전반에 걸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단순 행정통계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관련 통계 생산, 농경지 토양 보전·관리 원칙의 확립, 친환경직불금 단가의 현실화, 저탄소 인증제와의 관계 정립 등과 같은 정책대안 논의 예상

관련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확대

-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은 스마트팜 수출 관련 기업 및 종사자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기자재·인력·기술 등을 패키지화하는 것으로 '22년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팜 수출 규모는 137.3백만 달러 수준임
- 지난 6월 스마트농업 지원을 구조화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이후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논의

관련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 한류의 확산 등으로 농식품의 수출이 상승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적인 소비 위축 여파로 2023년 1월 농식품 수출이 2022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에서 보듯이 수출 상승의 둔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므로 현재 농식품 수출 추진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생산 및 수출 관련 기업

□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재원으로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가축 위생 및 방역,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됨
- 최근 축산발전기금의 사업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기금 재원은 감소추세여서 기금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2021년 이후 매년 재원 신규 차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금의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

관련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축산물수입업자 등 관련 기업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 피해 대응

- 최근 많이 안정되기는 하였으나,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소비심리 위축은 확산
-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분야,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

관련 대상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

□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제도 개선

- 양식어업의 소득 비과세 범위를 농축산업과 어로어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최근 수산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가능성

관련 대상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IPEF 공급망 협정 타결과 안정화 방안

- 2022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전략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
※ IPEF는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 달리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탄소 및 인프라, 세제 및 반부패 등 신통상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참여할 의제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경제협약체
- 중국발 요소수 대란과 희토류 수출 금지, 미국의 인출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 최근의 미·중 갈등 등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글로벌공급망 문제는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생존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문제제기 예상

관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업

□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

- 한전은 '21년, '22년 각각 5조 8,465억 원, 32조 6,552억 원 적자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22년과 '23년 1분기에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에 따라 연료비가 급등하고 이에 따른 전력시장 도매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손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23년 1분기에는 영업손실 6조 1,776억 원을 기록함
- 전기요금이 정책적·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전의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련 기관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확대

-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외사업장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실시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지원, 투자보조금(입지·설비보조금) 지원, 관세·법인세 감면, 스마트공장 보조금 지원, 인력지원, 입지지원, 금융지원, 보증·보험지원, R&D지원 등을 실시 중임
- 일정 부분 성과가 있으나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업종 및 기능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 예상

관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기업

□ 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탈취·편취·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으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해도 국내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1대국회에서 만 23건이 발의
- 기술유출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등 실효성 있는 기술유출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예상

관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ESG 경영 촉진방안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공시 의무화 확대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ESG 경영 요구 지속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K-ESG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 데에는 비용 및 시간 소요, 경험과 정보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함
-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확산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기업 실정에 맞춘 맞춤형 ESG 경영 지원 및 촉진 방안 모색 요구

관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기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

-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이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대략 2030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므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운영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적극적인 문제제기 예상

관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 공공구매제도를 통한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2017년 5조 5,200억 원에서 2022년 6조 8,5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13.7%에서 18.6%로 증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실적과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기술개발 결과로 나온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판로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중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소기업 범위 기준을 평균매출액으로 변경하였으나, 소상공인 범위 기준은 여전히 상시 근로자 수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범위 기준과 일관성이 없게 되고, 소상공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리고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이로 인해 더 이상 소상공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거나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전문직 고소득자, 고소득 임대업자 등이 소상공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전망

관련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단체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은 업력이 짧고 매출이 적거나 없어 기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이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엔젤투자(angel investment)가 기업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므로 이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 기대

관련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기업 및 단체

□ 메타버스 내 상표권 침해 대응

-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새롭고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창작활동에 따르는 지식재산권(특히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 현실 공간에서의 상품과 메타버스에서의 상품은 성질상 같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므로 규제 적용 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수립 필요성 제시

관련 대상

특허청, 관련 기업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계 직역별 갈등해소 요구

-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싸고 간호사 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간호사계가 간호법 제정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음
- 2023년도 국감에서도 동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의료-간호-간병-요양-돌봄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망)를 구축하는데, 직역 간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정 필요성 제기 가능성 높음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의료계

□ 방문진료/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

-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의로서비스 제공 필요성은 날로 증대
- 이에 따라 거동 불편환자 등 서비스 필요대상자들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 및 강화 요구도 함께 증대
- 방문진료/간호 필요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도농간의 격차 문제 해소 방안 수립 촉구 가능성 有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의료계, 관련 협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 제도와와 관련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제한적 시범사업' 계속 추진을 확정한 바 있음
- 제21대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심사중임
- 2023년도 국감에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해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관계자 국감 증인을 신청중임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의료계

□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및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요구

-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에 따라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 보상을 강화하기로 함
- 그러나 동 대책에 대해 중증 및 응급질환 보상 대책의 미흡, 중증 소아 진료 보상 및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대책의 실효성 의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리고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요구 가능성 有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의료계

□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정보 보안 대책방안 수립

-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해 ‘마이데이터’를 범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보건복지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과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
- 정부가 환자 편의성을 명분으로 마이헬스웨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 보험사·플랫폼 사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한다는 점, 데이터의 중앙 집적화로 인해 전산장애 발생 시 진료기록 조회 중지와 정보 보안 문제 등의 폐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료법」 등에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대책방안 수립을 요구 가능성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료계

□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촉구

- 바이오헬스 분야는 2019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과 함께 핵심 신산업 BIG3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13대 주력산업에 포함「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등을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전략의 특징과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투자(VC투자) 규모의 빠른 성장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국내 바이오헬스 3대 산업영역별로 산업 발전 속도와 성숙도 차이가 존재함
-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안전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며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를 확산하려면 보다 과감한 집중투자 요구 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헬스바이오 등 관련 기업

□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표기 검토 필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담배처럼 흡연 경고문구처럼 주류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방안 조치 강구 요구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주류회사 등 관련 기업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구매 문제

-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등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온라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 및 온라인 의약품 판매 알선 광고 등은 금지되어 있음
-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약사법」 적용하고 있으며,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르면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단계에서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외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허점을 통해 전문 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자가사용 기준 내에서는 수입이 가능
-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구매 및 오·남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방안 마련과 입법 필요성 제시 예상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회사 등 관련 기업

□ 희귀질환 치료제 지원 확대

-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되어 충분한 임상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려면 ‘선급여후평가’와 관련한 적절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적용대상의 선정, 보험 적용 가격의 수준, 급여등재가 된 상태에서 추후 약가협상 시 다른 약제와의 조건 동일성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 필요성 제기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제약회사 등 관련 기업

□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

- 응급의료체계는 일정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시설·인력·장비 등)를 조직화한 체계로서 응급 환자에 대한 현장 처치와 이송 중 처치, 병원 내 응급진료를 통한 사망률 감소 및 후유증 등의 유병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응급의료와 관련한 정보통신체계는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163, 국가응급의료 이송정보망(NAIS), 외상등록체계 통계 등으로 나뉘어 있어 등록체계가 중복되어 있고, 정보수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전송과 활용에서도 미흡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은 응급의료기관 및 기타 병의원의 가용 의료 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는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자동화된 검증 방법이 없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인 구급대 또는 응급환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미비
- 개인정보소유권과 정보이동권에 대한 정의, 변화하는 응급의료환경에 대한 대응,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기 가능성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설치 확대 및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수요 증대 대응방안 마련

- 초고령사회를 2년 앞둔 시점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와 노인대상 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유형별·지역별 분포도, 운영실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필요 시점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부담의 영역과 본인부담 영역에 대한 명확한 설계 구상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도입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음
-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관하여 지적된 바 있었으며 동일가치노동·동일가치임금, 실질임금 향상, 시설유형간 임금차이 해소 등을 위해 올해 국감에서도 문제제기 예상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 관련 협회

□ 새로운 장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장사시설 확충

- 정부는 지난 1월 초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키로 하며 장사시설의 지속 가능성, 서비스 질 제고, 국가책임 강화,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등 주요 과제 제시
- 2022년 3~4월의 화장 대란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의 수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장례업 관련 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 증대 및 활동지원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 미만인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공공이용시설들의 대부분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
- 공공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금융 지원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

□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 디지털 치료기기는 2세대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3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정신질환 등에서 기존 약물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며, 환자 데이터의 수집·관리·저장이 용이하여 환자 맞춤형 분석·치료 및 24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활용분야는 계획 확대중
-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시스템 내에 “처방”을 통해 대안적·보완적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후 건강보험 수가 책정 및 건강보험 적용(급여)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가 요구되며, 사용에 대한 국민(환자)의 인식 전환도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감에서 문제제기 예상

관련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업계 등 관련 기업

□ 신종마약류 규제 필요성

- 2000년을 전후하여 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합성물질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후 외국과의 교류의 확대, 인터넷이나 국제우편의 이용 증가, 새로운 유흥문화의 유행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마약류에 속하지 않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화
- 신종마약류는 특히 청소년 등 일반 젊은층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전략적인 단속, 다른 기관과의 공조 및 국제협력에 있어서 특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노동위원회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이 제외되고,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미적용되며, 주12시간 연장 한도 적용 제외, 유급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제도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사항에 대한 사각지대로서 존재하게 됨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적 기구가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의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입법화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해 많은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 포괄임금제 관련 쟁점

-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온 제도이나, 오남용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전면적 금지보다는 오남용에 대한 지도·감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규정을 형해화시켜, 「근로기준법」상 사각지대를 크게 만들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 상생형 지역일자리

-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노사민정의 협력·상생에 기반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획·실현하여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지역 특성별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판로 개척의 어려움, 민관협력 활성화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지속성장 가능한 방향 모색 논의

관련 대상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관련 지자체 및 기업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의 방향 전환

- 전기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부의 전기차충전시설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그간의 양적인 충전인프라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환경부, 전기차 생산 등 관련 기업

□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신뢰성 논란

- 최근 정부가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유해성이 우려된다 등의 내용들이 누락되어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환경보건법」은 환경오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건강영향조사는 이를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 예상

관련 대상

환경부, 시민단체 등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배출량은 생활양식 변화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플라스틱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와 발맞춘 플라스틱 사용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일회용 플라스틱 및 다회용기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환경부, 플라스틱 생산자 등 관련 기업

□ 페트용기 고품질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고

- 정부는 전(全)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플라스틱의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목표율을 설정하고, 특히 페트병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률을 설정한다는 입장
-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페트용기에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PCR 밸류체인, 에코디자인규정 및 인증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페트용기의 고품질 재생원료 의무사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예상

관련 대상

환경부, 플라스틱 생산자 등 관련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 대상을 인력 부족 업종 소규모 기업으로 한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부담 합리화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대폭 축소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3년 신설된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수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 취업 정책 중 50% 넘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공제 축소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

관련 대상

고용노동부

□ 자격시험 부실 관리 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의 특성상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정해진 절차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필수 이나 시험 출제·채점 부실 논란에 이어 올해 들어 응시 답안지에 대한 관리 부실사고까지 벌어졌고, 상당 기간 사고에 대한 인지조차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통보 조치 미흡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냄
- 국가자격시험 관리과정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력 업무의 기본적인 관리 운영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국가전문자격 검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회복방안에 대한 논의 집중 예상

관련 대상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교통위원회

□ 건설공사 부실 개선

- 최근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아파트 전반에 걸친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 부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총체적 부실 원인 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관련 기관·기업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 1990년 1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33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6조 5,188억 원 규모로 연평균 1,975억 원 수준이나 징수율은 73% 수준으로 징수율 상향조치 필요
- 현행 법률상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요구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대책방안 및 임대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의무

- 악의적 임대인이 저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을 전세임대한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는 전세사기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서민층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 이러한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구조적 요인인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확인 불가 등 계약단계별 부족한 정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악용,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법행위에 가담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방안 수립 촉구 전망
- 그리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기관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 재택근무 등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2020년 이후 급증하였고, 최근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4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도입됨
-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조치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므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LH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 주거급여 제도 개선

- 2015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방안으로 시행된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급여의 단계적 인상, 수급대상 확대,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경제규모 대비 주거급여 지원 규모는 적은 수준임
-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의 현실화,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 1인가구에 대한 주거정책

- 2021년 기준 1인가구는 33.4%이고,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임
- 1인가구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정책은 다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최근 가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바, 1인가구를 하나의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인지하고,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는 주거정책의 변화 요구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 배달업 성장, 배달업 종사자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과속·신호위반 등의 단속을 용이하게 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 강화, 교통안전 도모 등의 논의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

- 2021년 10월, 전국 총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에 비해 지자체의 면적이 넓어 승객(교통수요)의 규모와 이동 빈도가 줄어들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서비스 공급자는 운행횟수를 줄여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하지만, 교통서비스는 더욱 악화되어 승객 수요가 다시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서비스 지원과 이동권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 통합교통서비스(MaaS) 실현 방안 및 공정한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 아직 국내에서 통합교통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합교통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동력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
- 공정위가 배차 알고리즘을 통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를 한 모빌리티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 같은 사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관련 기업

□ 지상철도 지하화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 노선은 대부분 지상철도로 건설되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어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
- 신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주요 과제로 ‘지상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계획이 포함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제기 예상

관련 대상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위원회

□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 우리나라는 여성고용과 임금에 있어 성별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이를 교정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
-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경영정보공시제도(ALIO, DART)와 같은 기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내용과 방법, 정보 공개 대상 등의 확대, 여성 집중 종전·소규모업체·파견업체를 포함한 비정규직, 임시직, 대체인력의 고용임금정보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성고용 관련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예상

관련 대상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디지털 성범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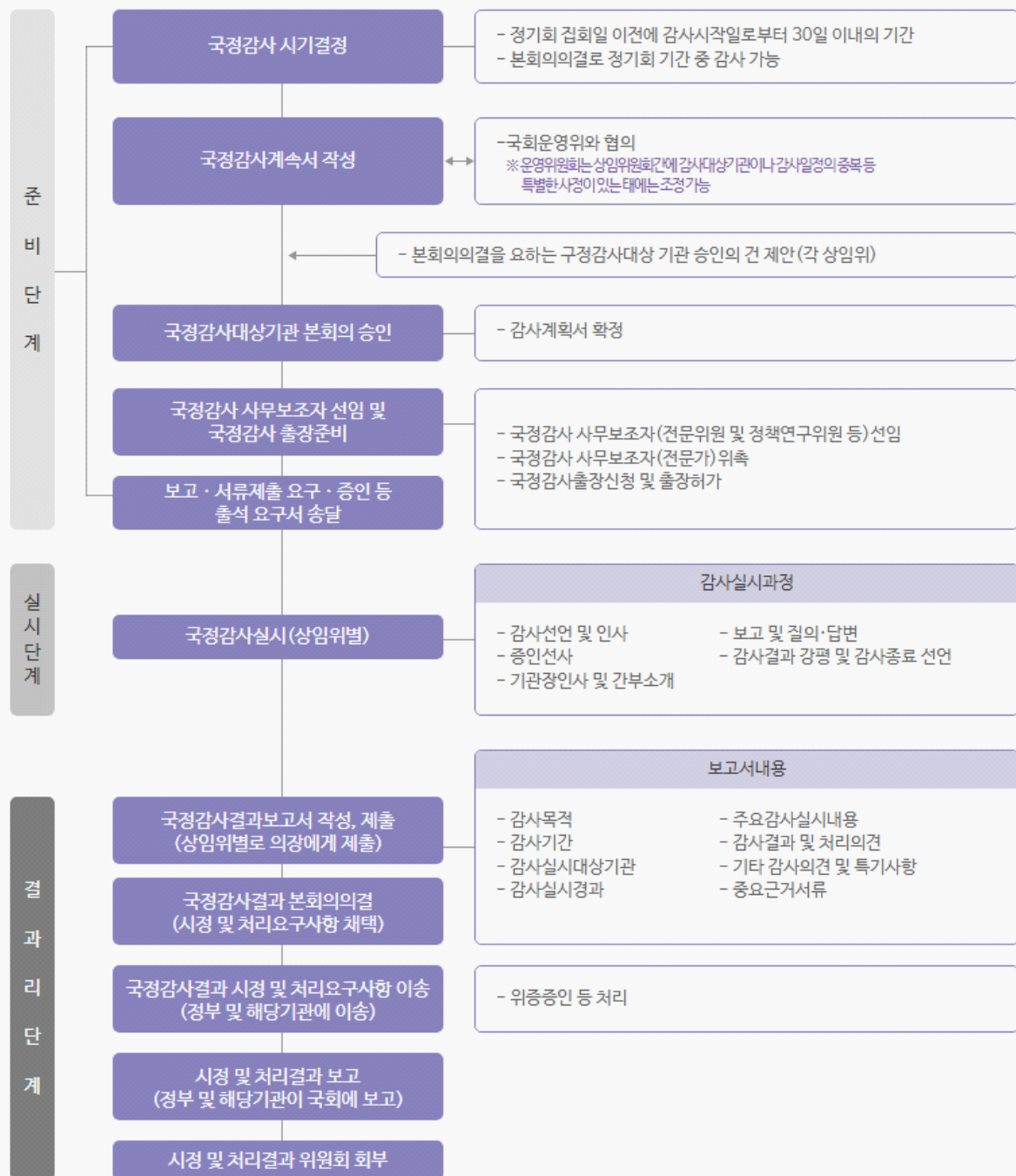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데이터 특성상, 수사기관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전통적인 압수와 달리,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하더라도 클라우드에 복제본이 있는 경우 피압수자와 수사기관 및 제3자의 공유가 가능하여 압수, 차단, 폐기 등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수사방법으로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에 대한 긴급보전명령, 정보제출명령, 긴급차단·삭제명령, 사이버범죄를 위한 압수·수색방법 도입 등과 같은 근본적인 피해최소화 대책방안 검토 필요성 제기 예상

관련 대상

여성가족부, 법무부, 전기통신사업자 등 관련 기업

2. 국정감사 절차도

▶ 국정감사 절차도



3.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 *해당 위원회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4. 2023년도 국정감사 각 상임위별 국감 일정안 (달력식, 9/26 현재) *세부내용은 국감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자료정리>	감사원
16	17	18	19	20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자료정리>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등
23	24	25	26	27
대검찰청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 등	<자료정리>	<종합감사>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	<자료정리>

정무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출연연구기관 등	금융위원회	<자료정리>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등
16	17	18	19	2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현장국감> 금융감독원	<자료수집>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수집>
23	24	25	26	27
<자료수집>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자료수집>	<종합감사비금융>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감사-금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자료정리>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자료정리>
16	17	18	19	2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등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등	<자료정리>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23	24	25	26	27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자료정리>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교육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	<자료정리>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6	17	18	19	20
감사준비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자료정리>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3	24	25	26	27
<자료정리>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자료정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자료준비
16	17	18	19	2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자료수집>	업무현황보고 (주)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료수집>
23	24	25	26	27
<자료수집>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자료수집>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대상기관 전체

국방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등	<자료수집>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16	17	18	19	20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KAI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자료수집>	해군7전단 해병대9여단 등	특전사훈련장 마라도
23	24	25	26	27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공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	<자료수집>	드론작전사령부 5군단	전체 수감기관

행정안전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자료수집>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6	17	18	19	20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자료수집>	인천광역시 인천경찰청	<자료수집>
23	24	25	26	27
충청남도 충청남도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경찰청 강원도 강원경찰청	<자료수집>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수집>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현장시찰>
16	17	18	19	20
감사준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등	<자료수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시찰>
23	24	25	26	27
국립중앙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자료수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속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수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16	17	18	19	20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자료수집>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자료수집>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23	24	25	26	27
<자료수집>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수집>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6	17	18	19	20
<현장시찰>	<현장시찰>	<자료수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3	24	25	26	27
<자료수집>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자료수집>	종합국감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 II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보건복지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자료수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16	17	18	19	20
<자료수집>	<자료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	24	25	26	2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자료수집>	<종합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자료수집>	환경부	고용노동부	<자료수집>
16	17	18	19	20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APEC 기후센터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현장시찰>
23	24	25	26	27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자료수집>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환경부 기상청

국토교통위원회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청 새만금개발청	<자료수집>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료수집>
16	17	18	19	20
한국토지주택공 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주) 등	<자료수집>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자료수집>
23	24	25	26	27
서울특별시 경기도	<자료수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자료수집>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청 새만금개발청